

2019 주요 업무보고

2019. 2. 25.

재 무 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5팀 238명/228명 (정/현원)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등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자 산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8,540,807	17,704,559	836,248	4.7
시 세	17,785,836	17,096,474	689,362	4.0
세 외 수 입 (시 전 체)	754,971 (1,479,810)	608,085 (1,477,974)	146,886 (1,836)	24.2 (0.1)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385,896	2,452,997	△67,101	△2.7
인 력 운 영 비 (통 합 편 성)	734,935	710,652	24,283	3.4
기 본 경 비	1,990	1,986	4	0.2
사 업 비	28,077	118,815	△90,738	△76.4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6,302	4,924	1,378	28.0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3,388	94,493	△91,105	△96.4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90	97	△7	△7.2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47	1,953	△1,806	△92.5
시세입 목표달성	10,555	9,727	828	8.5
조세정의 실현	7,596	7,621	△25	△0.3
타 기 관 지 원	1,620,894	1,621,544	△650	△0.1
자치구 교부금(재정보전금)	1,243,665	1,197,593	46,072	3.9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374,982	419,907	△44,925	△10.7
출연금	2,247	4,044	△1,797	△44.4

재 산 현 황 (市)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m ²)	동 수	면 적(천 m ²)
계	58,323	104,635 (100.0%)	57,296	9,931 (100.0%)
행정재산	56,152	103,269 (98.7%)	2,629	4,769 (48.0%)
일반재산	2,171	1,366(1.3%)	54,667	5,162 (52.0%)

II.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효율적인 재무행정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정책
과
제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실
천
과
제

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추진
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3.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추진
4. 효율적 지출관리 및 자금운용으로 수익 극대화

1.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 추진
2.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무행정 제공
3. 장애인 등 납세 취약계층 납부편의시책 개선

1. 계약심사 개선으로 적정원가 산정·품질향상 지원
2. 계약심사 서비스 확대 운영
3. 계약정보 통합·공개로 재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1. 주요재산 적극 취득 및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2.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
3.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2.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1-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추진

1-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1-3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추진

1-4 효율적 지출관리 및 자금운용으로 수익 극대화

1-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추진

자치구와 협업을 통한 징수활동, 탈루 및 누락 세원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금년도 시 세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

□ 목 표

'19년 시세 징수 목표 17조 7,858억원

- 전년 대비 6,893억원(4.0%) 증가 -

시세 징수율 제고



세원 발굴 강화



강력한 체납 징수

□ 추진 내용

- 시·구 합동 징수활동 및 자치구별 목표관리제 강화 ➔ **시세 징수율 제고**
 - '19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시·구 합동 대책회의(연2회)
 - 세목별·월별 세입실적 분석·보고 및 자치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카카오톡(알림톡),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기분 납부 홍보 강화
-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 등 ➔ **세원 발굴 강화**
 -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조사 및 비과세·감면 자료 관리 강화
 - 과세자료가 공유되는 세목 간 교차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 방지
- 신속한 채권확보,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 **강력한 체납징수**
 - 체납자 적시 압류로 조기채권 확보 및 공매·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
 - 재산은닉자, 호화 생활자, 사회 저명인사 등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재산 추적

□ 추진 일정

- 시세 세입징수 및 체납징수 종합대책 수립·추진 : '19. 2~12월
- 시·구 합동 징수대책 회의 개최(2회) : '19. 4월, 9월

1-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효율적인 체납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시세 징수 목표 달성

□ '19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 : 2,216억원

□ 추진 계획

-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한 선제적 징수활동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는 납부기한 이전에 사전 재산조사 등 채권확보
- 호화생활자,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대상 : 고급 외제차 소유, 고가주택 거주,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 조치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위장이혼, 명의대여 등 체납처분면탈행위 조사 및 고발
- 체납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
 - 납세담보제도 활용하여 세무서등 타기관 보다 선순위 채권 확보 방안 마련
 -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 검찰고발 및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압류차량 강제 매각
 -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자치구 상호간 위탁 영치 강화
 - 관외 지역 대포차 운행자 출장 추적조사, 상습 체납차량 경찰청 합동단속
- 「은닉재산 신고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산 추적
 - 체납처분 면탈·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추진 일정

- '19년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 '19. 2월
- 시·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징수 우수사례 발표 등) : '19. 5월, 9월
- 가택수색·동산압류, 검찰고발, 행정제제 등 실시 : 연중

1-3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 신고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질없이 준비

□ 추진배경

- 현행 세무서 대행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를 '20년 자치단체 접수로 전환
 -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약 150만명('19년 예산액 7,054억원) 신고 예상
 - 이중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개인은 약 25%(38만명) 규모 추정
 - ▶ '20. 5월에는 세무서 방문 38만명을 자치구에서 민원처리 예정

□ 추진내용

- 시·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증원 연내 완료
 - '19년 예행연습 소요인원 44명(시 1, 구 43명)은 합동근무 전 충원
 - ▶ 시 1명 정원확보 완료, 자치구 정원확보(구별 1~3명) 진행중
- '19. 5월 예행연습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업무협의 진행
 - 市는 서울지방국세청, 자치구는 관할 세무서와 합동근무일정 등 협의
 - ▶ 市에서 예행연습 시나리오 작성, 자치구 사전교육 실시('19. 4월 중)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직접 접수 대비, '19. 5월 예행연습 실시
 -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세무서 신고현장 합동근무('19. 5. 1~31)
 - ▶ 시·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44명(시 1, 구 43명) 증원 예정
 - '20. 5월 본격 신고접수 사전 대비 시 주관 예행연습 백서 발간

□ 추진일정

- '19. 5월 예행연습 시나리오 작성 및 자치구 교육 : '19. 3~4월
-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세무서 합동근무 : '19. 5월
- 시·자치구 합동T/F 구성, 백서 발간 : '19. 8월

1-4 효율적 지출관리 및 자금운용으로 수익 극대화

금고 환경 변화, 지방채 발행 등을 고려한 자금관리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수급과 이자수입 증대

□ '19년 적용금리('19.1.16기준 COFIX 금리 : 2.04%)

- 정기에금 : COFIX 금리+가산금리
 - 1개월(-0.11%), 3개월(+0.08%), 6개월(+0.35%), 12개월(+0.55%)
- 공기에금 : 1.52%(고정)

◆ '18년 자금운용 현황

- 자금규모 : 평잔 3조 6,367억원, 공기에금 잔고 3~4천억원
- 이자수입액 : 721억원(일반회계 555억원, 특별회계 166억원)
 - 이율 : 정기에금(1.85%), 공기에금(1.85%)



□ 추진 계획

- 새로운 적용금리를 감안한 맞춤형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소액 분산 예치
 - 자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중·단기 예금 적정 분할 예치
- 정기에금 예치율 최소 85% 이상 확대 운용으로 이자수입 제고
 - 정기에금 목표 예치율을 전년목표 대비 5%이상 상향 조정('18년 80% ⇒ '19년 85%이상)
 - 최근 3년간 월별 자금수지 현황을 분석하여 일평균 잔고 최소화 목표관리
- '19년 지방채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기하여 재정부담 최소화
 - 회계간 전용 및 자금이월 등 가용자금 선 지출로 지방채 발행시기 최대한 연기, 부족재원 발생시 지방채 발행하여 이자부담 최소화(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의)
 - ※ '19년 지방채 발행 규모 : 총 2조 3,667억원(신규 1조 5,274억원)

□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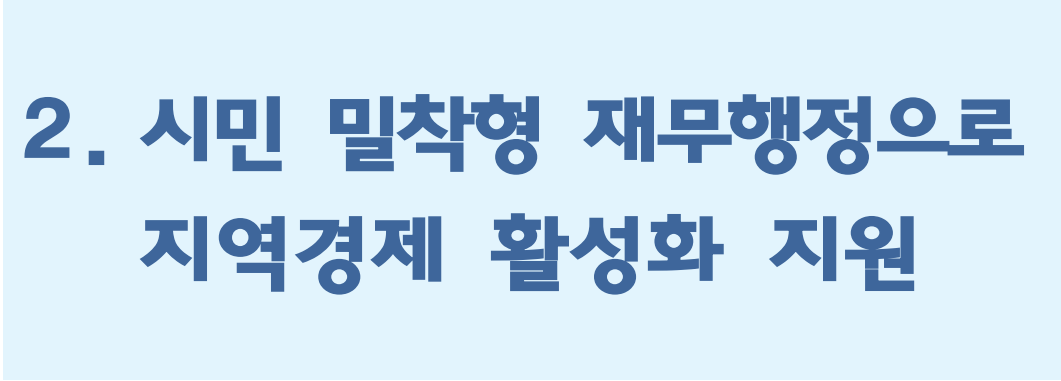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월별 자금수지 현황분석 및 자금운용 계획 수립 : '19. 2월~

세무 분야 예산집행현황(총괄)

(단위 : 천원, %, '19.1.31 기준)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1,639,166,775	89,170,830	5.4	
세 제 과		1,246,034,430	88,001,764	7.1	
재정보전금	- 25개 자치구 대상, 재정보전금 교부를 통한 자치구간 재정 격차 해소	1,243,665,000	87,983,979	7.1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2,247,130	0	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의결 - 위원회 구성 : 판사 등 25명	112,300	17,785	15.8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 연구과제 발표·토론을 통한 지방세제 개선사항 도출 및 법령개정안 마련	10,000	0	0.0	
세 무 과		385,536,299	84,081	0.02	
시세징수교부금	-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액의 3%를 지급하는 법정경비	374,981,670	0	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한국화훼납세조합 등 17개 조합)에 대한 법정 징수교부금 지급 (납입세액의 5%)	546,930	0	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 통합인쇄 및 봉투제작	800,909	64,234	8.0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 수수료 지급 및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울시분담금 지급 - 납세편의서비스 : 카드이용납부, 문자안내, 편의점 납부 등	178,562	7,097	4.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 자치구 교육 교재 발간비, 과징지도 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입확보 유공 시상금 등	193,000	6,505	3.4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 ETAX 전자납부 마일리지 지급	542,760	2,252	0.4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30,000	0	0.0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시세 세원발굴 지원	- 민간인 및 공무원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관련 포상금 집행 - 분기별 자치구 시세 세원발굴 포상금 재배정	130,000	0	0.0	
시 세입증대 자치구협력 및 지원사업	- 자치구에 위임되어 징수되고 있는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입 징수실적 등을 최대화하여 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5,000,000	0	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세무종합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 지방세 부과·징수처리 및 운영 지원 -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1,602,406	0	0.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상용 SW, DB 관리	23,109	0	0.0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 서울시 지방세정보화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분석 - 서울시 지방세정보화 발전방안 구축전략 및 개선모델 마련	664,088	0	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상용 SW, DB 관리	842,865	3,993	0.5	
38세금징수과		7,596,046	1,084,985	14.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체납시세 징수에 따른 시· 자치구 징수공무원 포상금 집행	2,222,482	0	0.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따른 대행사업비(분기별 지급)	5,083,954	1,062,000	20.9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 체납징수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징수공무원의 사기 고취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11,000	0	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 고액체납징수 및 채권확보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위한 우편료 및 차량운행비 등 지급	278,610	22,985	8.2	



2.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1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 추진

2-2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무행정 추진

2-3 장애인 등 납세 취약계층 납부편의시책 개선

2-1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 추진

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 추진 방향

- 경쟁계약 가산점 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 공공사업 낙찰가능성 제고
- 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을 통한 지역업체 우선 선정
- 신생·소규모 지역업체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실무교육 확대 추진
- 자치구별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로 지역업체 판로 개척 지원

□ 추진 계획

- 일반용역 경쟁입찰 **적격심사시 자치구 소재업체 가산점 신설**
 - 도시재생 등 지역기반 사업 추진시 해당 자치구 소재 업체 가점 2.0점 신설
 - 일반기업이 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입찰시 가점 2.0점 신설
-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주를 위해 자치구별 수의계약 강화
 - 자치구별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 분석 및 적극 독려
- **지역업체 대상 계약실무교육 확대 실시** ('18년 1회 ⇒ '19년 2회)
 - 공공시장 진입 경험이 적은 신생·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실무교육 정례화
- <서울계약마당>에 자치구별 우수기업 홍보 강화 ('18년 24개 ⇒ '19년 50개)
 - 자치구별 우수기업 지속 발굴 및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 우수기업 제품정보를 자치구별 공개·공공기관 구매 독려

□ 추진 일정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19. 2월 중
- 지역업체 대상 계약실무교육 실시(연2회) : '19. 5월, 11월

2-2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무행정 추진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우수희망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강화,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원 등 서민 경제활동 지원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세무상담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를 마을(동)과 연결하여 지역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 활동인원 : 358개동 331명 *임기 2년('18~'19)
- 서울시 전체 424개동 중 66개동 마을세무사 미지정



□ 추진경과

- 세무사 재능기부와 연계한 **지자체 최초 민관세정협력사업** 시행('15.1월)
- 서울시 사례 **전국으로 확산**('16.6월 행안부)
- 규모확대 : 143명('15년)→ 213명('16년)→246명('17년) →331명('18년)
- 상담실적 : 14,071건('15년 2,168건, '16년 3,749건, '17년 4,042건, '18년 4,112건)

□ 추진내용

-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세무상담서비스 강화(331명 → 424명)
 - 서울시 모든 동에 마을세무사를 지정하여 생활 속 세금고민 상담지원
 - 자치구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
- 자치구 단위 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및 시민 점점 홍보
 - 25개구 지역세무사회 연계, 자치구별 협의체 구성 정기 간담회
 - 지역공인중개사,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 네트워크 활용 다각적 홍보
-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 운영 내실화
 - '찾아가는 서울시청'(시민소통담당관)에 참여, 법무사·복지사 등과 협업 현장상담

□ 추진일정

- 자치구별 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및 마을세무사 위촉 : '19.2월~

우수 희망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강화

□ 추진 방향

- 희망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 희망기업을 발굴·홍보하여 우수 희망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 및 지원 강화

□ 추진 내용

-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지속적 확대 및 실적관리 강화**
 - 목표 : '18년 1조5,007억원 → '19년 1조6,207억원(예상)
 - 목표설정에서 관리까지 소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등)와 체계적 역할분담·수행
- 「**희망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우수기업 판로 지원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만족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품목별로 만족도가 높은 우수업체(3~5개) 선정
 - 서울계약마당에 우수기업 특화제품 정보(카탈로그 등) 게시

※ 희망기업 :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장애인기업, 소기업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속 지원

□ 사업 개요

-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해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 체납처분 및 체납액 징수유예, 실익 없는 장기압류 채권 등 압류해제

□ 추진 계획

- **체납 영세사업자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 시·구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상담창구 운영 및 시민 신청을 통해 지원
 - 분납이행서 등을 통한 납부의지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중지 등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징수 유예**
 - 납부의지 있는 체납자의 압류재산 강제매각을 유예하여 사업 정상운영 지원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에 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유예

- 실익 없는 압류채권 및 무체재산권 압류 해제 지원

2-3 장애인 등 납세 취약계층 납부편의시책 개선

기존 납세편의 시책은 일반인 및 내국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납세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서비스 개발

□ 추진 개요

- 장애인·어르신 등 납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매년 증가
 - 장애인 : '15년 62.5% → '17년 70%
 - 어르신 : '15년 45.6% → '17년 58.3%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세 납세자 증가
 - (주민세) '17년 68,936건(413백만원) → '18년 74,474건(434백만원)

□ 추진 내용

-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3대 납세 취약계층 납부 편의 개선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ARS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99-3900 전화, 음성에 따라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는 ARS 납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99-3900 전화, 화면에 따라 납부 - 청각/언어장애인 및 어르신 등 쉽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방문 CD/ATM기 등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어르신 등 은행방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무인수납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동불편 장애인, 어르신 등 납부불편 해소 - 저시력/색각 장애인 및 어르신용 기능 구성 (납부기능 중심의 직관적이고 심플한 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ETAX) 한국어, 영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및 영어권 외국인에게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용 홈페이지(ETAX), 앱(STAX)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AX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제공 - STAX : 한국어, 영어 제공

- 납부 편의 시스템개발 TF팀 구성·운영
 - 구 성 : 총 16명 (세입수납운영팀 6명, 시금고 은행 10명)
 - 역 할 : 현황 실태분석, 시스템 설계/구축 검토, 타시스템 연계 협의 등

□ 추진 일정

- 납세 취약계층 납부 편의 증진 서비스개발 컨설팅 : '19. 2월~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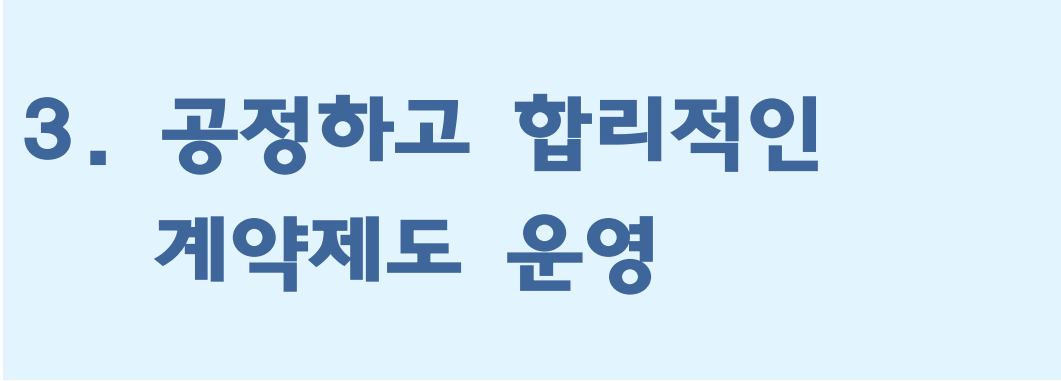

○ 납부 편의 서비스 개발 · 구축 및 제공

: '19.10월 ~

재무행정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 '19.1.31 기준)

구 분	사업내용 · 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741,017,669	72,342,966	9.8	
재 무 과		740,992,939	72,341,966	9.8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공통 행정물품 보급지원 및 반납물품, 재활용 등 자재 창고 운영 - 노후물품 및 복합기, 프린터 구매지원 등	1,053,718	7,266	0.7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서울시 통합 결산서 작성 및 수검(1~5월) - 시의회 결산승인(6월) - 알기쉬운 재무정보 제작(7월) - 재정연감 등 결산통계 작성(8~10월)	232,015	1,750	0.8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 e호조 시스템 자치단체별 분담금 지급	40,053	0	0.0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 온라인으로 수입증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36,507	0	0.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	4,395,151	94,969	2.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 본청 및 사업소 일반회계 소속 인건비 통합편성	734,935,495	72,237,981	9.8	
세 제 과		24,730	1,000	4.0	
마을세무사 운영	-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24,730	1,000	4.0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3-1 계약심사 개선으로 적정원가 산정·품질향상 지원

3-2 계약심사 서비스 확대 운영

3-3 계약정보 통합·공개로 재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3-1 계약심사 개선으로 적정원가 산정 · 품질향상 지원

적정한 원가산정과 함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VE) 심사 내실화 및 서울형품셈 개발 등 추진

□ 추진 계획

○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VE) 심사」 내실화 추진

- 공사 규모·종류별 운영절차 차별화로 심사의 효율성 제고

구 분	100억 이상 공사	50억~100억 미만 공사 100억 이상 반복 공사
회의일수	3일	2.5일 (△0.5일)
운 영 자	외부전문가 (설계VE 리더)	내부공무원 (설계VE 담당)

- 전담팀 운영, 전문가 양성 등 설계경제성(VE) 심사의 운영역량 강화
- 30억원 이상 설비분야 공사성물품에 대한 경제성심사 도입 추진

○ 현장과 함께하는 「서울형품셈」 개발로 공사의 품질제고와 전국 표준화 주도

- 건설업계·발주부서와 민·관 합동 TF 구성 등 협업방식으로 정비 및 개발 추진
 - ▶ 5개분야 7개 서울형품셈 신규 개발, '18년 정비결과 보완대상 품셈(6개) 정비 등
- 서울형품셈 증보판 발간·보급, 정부표준품셈 등재로 전국 확산 추진
 - ※ '18년 신규개발한 신재생에너지설비 품셈 5건 정부표준품셈에 등재

○ 「원가계산 실무교육」 개선 : 공급자 중심 획일적 교육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 (교육시기 조정) 분야별 교육수요 및 발주시기에 따라 시기조정(분기별 실시)
 - ▶ 1분기(토목·전기·구매), 2분기(기계·조경), 3분기(건축·용역), 4분기(민간위탁)
- (교육방식 다양화) 업무성격·부서성격에 따라 교육방식 다양화(강의, 워크숍, 컨설팅 등)

□ 추진 일정

- 설계경제성(VE) 심사 시설물별 기능 및 평가기준 표준화 : '19. 2월
- 서울형품셈 정비('19.6월), 증보판 발간('19.7월), 신규개발('19.1~12월)

3-2 계약심사 서비스 확대 운영

민간공사 원가자문·일괄신청 통합심사·맞춤형 설계자문 등 계약심사 서비스 대상 확대 강화를 통해 시공비 절감과 조합원간 갈등 예방

□ 추진 계획

- '민간공사 원가자문' 대상 확대: 2개조합 ⇨ 6개조합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재건축·재개발 조합 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원가자문 확대 실시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면적 1만㎡ 미만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 조합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설명회(2월) 및 방문설명(2~3월) 등 홍보강화
-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확대: 8개유형 185건 ⇨ 9개유형 207건
 - 대상사업 적극 발굴·확대로 9개 유형 207개 사업 대상 실시
 - ※ 교량 일상유지보수·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지하철 구조물 내진보강공사 등
 - 공사업종별 공통 설계기준·원가심사기준 적용을 위한 심사전담반 구성
 - ▶ 4개팀 9개반
 - 사업부서와 TF 등 협의체 구성, 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설계 기준 협의
- 계약심사 前 맞춤형 설계자문 대상 확대: 12건 ⇨ 20건 이상
 - ('18년)절감률 15%이상 사업 ⇨ ('19년)절감률 10%이상 사업+희망부서사업으로 확대
 - ▶ 전년도 절감률 10% 이상 사업(부서) : 총 7개 기관 19개 사업
 -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출 적정여부 등 사전자문으로 서류보완 및 심사기간 단축

□ 추진 일정

- 민간공사 원가자문 사업설명회·조합 방문 설명 : '19.2~3월
- 일괄신청 통합심사 심사전담반 구성·발주기관 합동회의 : '19.2~3월
 - ※ 유사사업별 공통 설계기준 마련 및 발주시기 조정
- 맞춤형 설계자문 희망부서 사업 수요조사 및 선정 : '19. 2월

3-3 계약정보 통합·공개로 재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온라인을 통해 발주(계획)부터 입찰, 계약 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공개하는 서울계약마당을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효율성 도모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19.1. ~ '19.12.
- 사업비 : 107,413천원
- 사업내용



- 법·제도·규정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계약정보 공개
- 계약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희망기업 제품 활성화 체계 정립

□ 주요 추진내용

- 서울시 **모든 계약정보 통합·공개**
 - 분산된(행자부, 조달청 등) 계약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대시민 공개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의 발주(계획), 진행과정, 대금지급 등 공개
- 자치구별 **희망기업의 위치·제품 정보 제공**
 - 희망기업(약 20만건)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연계하여 활용
 - 희망기업 자치구별 지도(위치) 제공 및 「희망기업제품 홍보 창구」 운영
- 계약업체 **이력관리**
 - 계약실적, 납품내역, 건설공사, 제품정보 등 업체별 계약관련 통합관리
 -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이력(89,247건, 10,314개 업체) 제공 받아 연계
- **인터넷 실적증명 서비스 제공 확대**
 - 전기공사, 시설공사, 용역, 물품 등 4종 서비스('18년 실적 : 7,577건)
 - ※ 19. 3월 이후 기존 4종에서 8종(소방, 통신, 건설, 폐기물 등 4종)으로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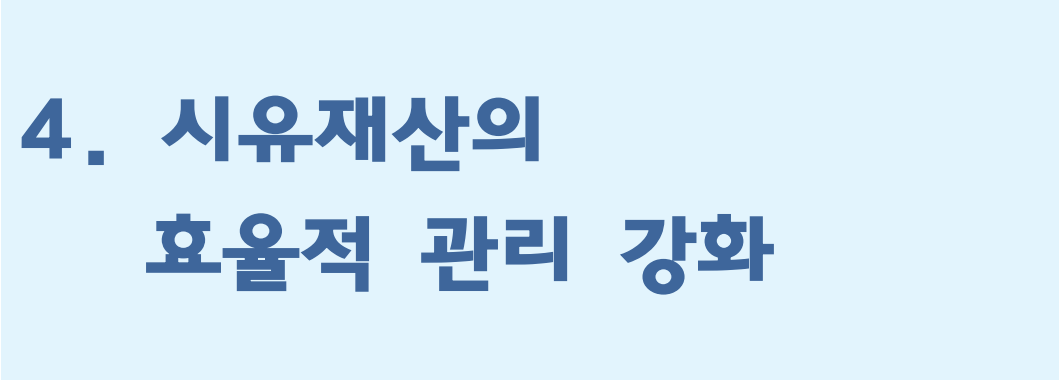

□ 추진 일정

- 희망구매 목표 및 (월)실적 등록 : '19. 2월~계속
-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획득 : '19. 9월

계약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9.1.31 기준)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333,957	21,370	6.4	
재 무 과		244,087	8,870	3.6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 체결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등 심의 - 위원회 구성 : 변호사 등 13명 	20,484	0	0.0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장터 입찰공고 수수료 납부 	116,190	8,870	7.6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 상용 SW라이선스 구매·설치 	107,413	0	0.0	
계약심사과		89,870	12,500	13.9	
계약심사 업무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 원가분석자문회의 실시 	54,000	7,500	13.9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VE 특별교육과정 실시 - 설계VE담당 공동연수 실시 	35,870	5,000	13.9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4-1 주요재산 적극 취득 및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

4-3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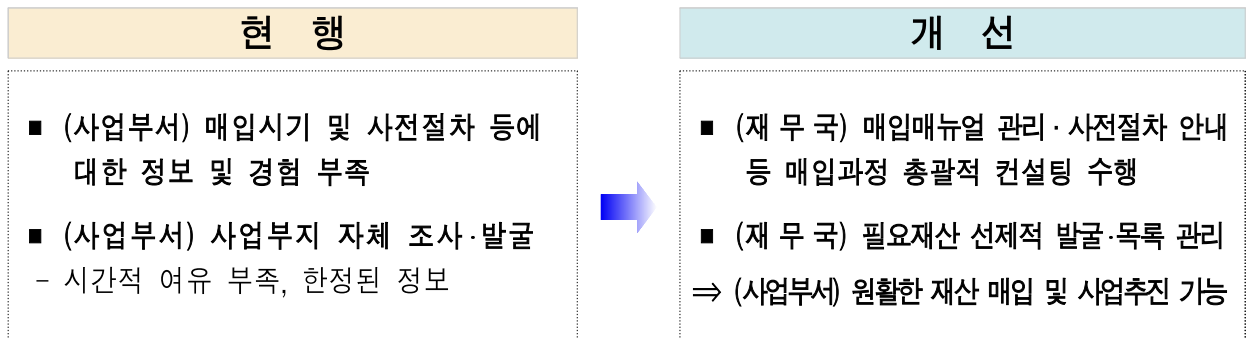
4-1 주요재산 적극 취득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우리시 필요재산을 시 소유로 적극 확보하고,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 함으로써 행정수요 적기 대비 및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 도모

□ 추진 계획

○ 市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건물 지속 발굴 및 전략적 매입 검토 추진

- 권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입지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취득 필요 재산 발굴
- 매입 매뉴얼 관리·사전절차 안내 등 재산매입 과정 총괄 컨설팅 역할 수행



○ 시유재산 활용실태 점검 정례화 및 소요조회로 사업부서 공간 수요 적기 대응

- 가용재산 발굴을 위해 연 1회 이상 시유재산 활용실태 점검 실시
- 발굴된 가용재산은 소요조회를 통해 필요 부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 서울기동본부 부지, 잠실운동장 부지 등 주요 시책사업 요충지 적극 취득

-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상 지속 추진
- 소송이 진행 중인 잠실운동장 부지는 市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업하여 적극 대응

□ 추진 일정

- 시유재산 활용실태 점검 및 소요조회 실시 : '19. 2 ~ 12월
- 주요 시책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추진 : '19. 2 ~ 12월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매각 대상 재산은 적기 매각하는 등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 도모

□ 추진 계획

- 「'19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관리체계 확립
 -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으로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정확도 개선 및 조사대상 재산별 적정 관리 방안 마련
-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 마련으로 **시유재산 적기 매각** 추진
 -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지구 내 시유지 적기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와 적극적·선제적 업무협약
 - 보존부적합 시유지 공개매각 및 매각(임대)가능 재산정보 인터넷 상시공개
-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 활용계획 변경(주택공급 부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19)'에 따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주차장 부지(7천㎡)가 주택공급 부지로 선정
 -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역발전본부 등) 및 변경된 계획에 따른 지적정리(재무국) 실시
 -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019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추진
 -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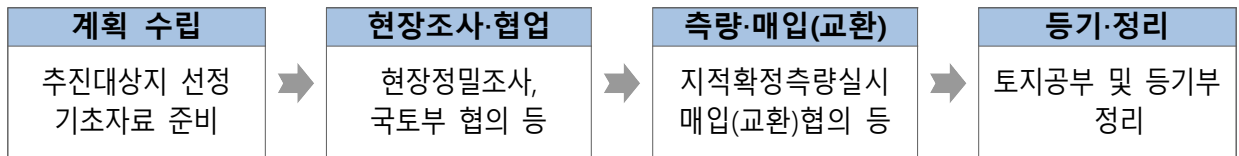
- 정밀 실태조사 용역사업 입찰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 '19.4~5월
- 보존부적합 시유지 공개매각 추진(연 4회) : '19.2~12월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후속절차 이행 : '19.2~12월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적정리(2~9월), 공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7~9월)
- '19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 : '19.4월

4-3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주요시설 내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를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단일필지로 집단화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및 재산가치 현실화

□ 추진 개요

○ 사업 추진 절차



○ 그간의 추진성과('16~'18)

- 필지 수 감소, 면적 증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재산관리 효율성·경제성 강화
 - ▶ '16~'17년(8개소) : 관악영어마을, 어린이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상암근린공원, 길동생태공원, 뚝섬로, 문화비축기지, 보라매공원
 - ▶ '18년(4개소) : 혁신파크, 다락원 및 평화문화진지, 강남자원회수시설, 북서울꿈의숲

□ 추진 계획

○ 추진 대상(총 4개소 예정)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서울숲, 암사선사유적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추진사항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실시 및 관계기관(국토부, 자치구, 국토정보공사 등) 협의
- 지적확정측량 의뢰 및 측량실시(검사측량 포함) 등
- 토지대장·등기부 등 지적공부 등록 조치,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결정 의뢰

□ 추진 일정

- '18년 집단화사업 대상부지 후속조치(등기정리 등) : '19.2~4월
- '18년 성과보고 및 '19년 추진계획 수립 : '19.2~5월
- 측량, 공부 정리 및 매입·교환 등 집단화 사업 추진 : '19.2~12월

재산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9.1.31 기준)

구 분	사업내용·추진계획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3,388,280	6,890	0.2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 안전점검 및 수선 - 주요시설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재산교환 차액 등 지급 	700,000	0	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 - 재산 교환·매각에 따른 감정 평가 실시 - 시유지 집단화 사업추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617,437	6,890	0.3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기능개선 추진 	70,843	0	0.0	

IV.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전망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19.1.31 기준)

구 분	'19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산전망	비고
계	18,540,807	-	-	-	
시 세	17,785,836	-	-	-	
세 외 수 입	754,971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19.1.31 기준)

구 분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2,385,896,257	161,701,659	6.8	
사업예산(계)	1,648,971,186	89,304,075	5.4	
재 무 과	6,301,531	112,855	1.8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053,718	7,266	0.7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2,015	1,750	0.8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053	0	0.0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336,507	0	0.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4,395,151	94,969	2.2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484	0	0.0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16,190	8,870	7.6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07,413	0	0.0	
자 산 관 리 과	3,388,280	6,890	0.2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700,000	0	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617,437	6,890	0.3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0,843	0	0.0	
계 약 심 사 과	89,870	12,500	13.9	
계약심사 업무추진	54,000	7,500	13.9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5,870	5,000	13.9	

구 분	'19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세 제 과	1,246,059,160	88,002,764	7.1	
재정보전금	1,243,665,000	87,983,979	7.1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247,130	0	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2,300	17,785	15.8	
마을세무사 운영	24,730	1,000	4.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000	0	0.0	
세 무 과	385,536,299	84,081	0.02	
시세징수교부금	374,981,670	0	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46,930	0	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00,909	64,234	8.0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78,562	7,097	4.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3,000	6,505	3.4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542,760	2,252	0.4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0	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000	0	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0	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602,406	0	0.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23,109	0	0.0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664,088	0	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42,865	3,993	0.5	
38세금징수과	7,596,046	1,084,985	14.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2,482	0	0.0	
자동차세체납처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083,954	1,062,000	20.9	
체납징수기법 공유 사·구 합동워크숍	11,000	0	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78,610	22,985	8.2	
행정운영경비(계)	736,925,071	72,397,584	9.8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34,935,495	72,237,981	9.8	
기본경비	1,989,576	159,603	8.0	

V.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5	33	12	-	-
	시정· 처리요구사항	34	23	11	-	-
	건의 사항	3	2	1	-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받은 건 서울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임. 행정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음. 죄송하다는 표현보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임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과오납의 주요 원인은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결과 발생하는 환급액이 평균 90% 이상 대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타시도에 비해 과세건수 및 세액이 많고, 특히 대도시내 중과세, 비과세·감면 적용 등 부과 시점부터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특수한 사례가 많아 불복청구가 많음 ○ 과오납금 최소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등 주요 과오납 발생 세목 및 세무조사 등에 대한 직원 교육 강화, 세무종합시스템에 자기검증 기능 강화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조세전문기관 자문 등 부과 정확성 제고를 통해 과오납 발생 최소화 강구 -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 불복 제기시 시·구간 공동대응을 통한 승소율 제고 ○ 시 세입분야 평가시 환급금 관리실태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과오납 발생에 대한 과세담당자의 인식 개선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과(추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세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시·구간 긴밀한 업무협의 ○ 과오납 사유분석을 통한 분류코드 오류발생 최소화 등 부과취소자료 적정 관리방안 강구 ○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토론회 등 개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16년 대비 2018년 8월까지 과오납이 3배가량 늘어났음. 과오납이 일어나지 않는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유 조사결과, 자치구 과세담당자의 환급금 관리코드 입력 오류가 다수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환급금에는 행정기관 착오나 불복청구에 따른 과오납금과 기관착오와 관련없이 개별세법에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이나 납세자 착오에 따른 환급세액으로 구분되는데 - 고액 과오납금 자료의 감액코드 분석 결과, 국세경정이나 납세자 착오 등 환급세액으로 입력 관리해야 할 환급금이 행정기관 착오 등 과오납금으로 분류 입력되어 2018년 과오납금이 지속 증가함 - 시 세입분야 평가시 환급금 관리실태 항목 중 감액사유 입력코드 적정유무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자치구 과세담당자의 관심 유도 및 정확한 관리체계 구축 ○ 부실과세 방지 및 불복 청구 시 승소방안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금 유형별 분석결과 대부분 불복청구 패소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바, 불복 제기시 市·區간 공동 대응과 보조참가 등을 확대하여 불복청구에 적극 대응 추진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 사유분석을 통한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담당 직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무 교육실시와 과세전문가 자문 등 피드백 강화 - 세무종합시스템에 자기검증 기능 및 정확성 체크기능을 제공하여 부과시점부터 과세자료의 정확도 향상 - 시 세입분야 평가시 환급금 관리실태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과오납 발생에 대한 과세담당자의 업무 개선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교육제도 개선하였으나 변화된 것이 없음. 교육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지 횡수만 늘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적극 시행 - 시 및 자치구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인재개발원을 통한 취득세 및 소득세 등 주요세목 교육 - 지방세관계법 개정 또는 행안부 지침 통지 시 개정부분 교육실시 -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사전 정비계획 수립 · 시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분 과세 전 담당자 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정기교육 참여 ○ 신규자부터 중견실무자까지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직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임용전·후 교육 - 실무 사례분석 및 쟁점사항 위주의 핵심 심화과정 개설 - 수요자 중심의 공개요청 과정 신설(커뮤니티 강화)
<p>○ 지방세연구원의 해외 비교연수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비교연수사업은 외국 지방세 제도·사례연구 및 조사를 통해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세제연구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 중임 ○ 연구원에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해외비교연수 운영방안 개선을 요청('18.12.04.)한 결과, 연구원 운영방안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대상자를 시도별 우수 공무원 선발·연수에서 2019년부터 공모제로 변경 및 사업비 축소(2.9억원⇒1억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 협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지방세연구원의 해외비교연수 지원액이 권익위에서 금지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 되지 않는지와 서울시 여비 지급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전수조사해 보고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16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해외연수제도는 사회 상규 상 허용범주에 해당하는 기준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 연수비용은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 협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p>○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내역과 의회에 미보고 사항 지적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지급시기 : '18.4.10 (사용액 약 480백만원) ○ 지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청에서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 시, 귀속비율을 일반매각에 준하는 20~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미지급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 제기 - 일부 패소(13%패소, 87%승소)한 소송으로 항소제기 중 -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판결금, 이자액을 선 집행하고 추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 '18.11.21. 제 284회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예비비 집행시 예비비 지출승인조례에 의거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체없이 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하는 예산 과목으로 미리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지급시기 : '18.4.10 (사용액 약 480백만원) ○ 지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청에서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 시, 귀속비율을 일반매각에 준하는 20~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미지급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 제기 - 일부 패소(13%패소, 87%승소)한 소송으로 항소제기 중 -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판결금, 이자액을 선 집행하고 추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 '18.11.21. 제 284회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예비비 집행시 예비비 지출승인조례에 의거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체없이 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겠음
<p>○ 시금고 대출수수료 수입 등 수수료 부담에 대한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 반영기준을 기초실과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금고 대출수수료는 시금고에 귀속되므로 서울시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음 ○ 다만,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시금고에 협조 요청하는 등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법률적인 검토가 면밀히 되지 않는 행정이 재무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시정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기대각한 체비지의 최종 소유자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방식(화해권고)으로 등기이전을 추진해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권고사항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정판결로 판결문상 패소가 아닌 화해권고결정임 ○ 또한, 세무 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소송 담당 직원을 보강하였음(1명→3명)
<p>○ 상품권 지급 관련 임금성격의 지급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서별로 구입내역을 공개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15.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 - 전년도 구매 및 지급내역 공개(매년 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청 및 사업소 전 부서 '18년도 상품권 구매내역 공개 : '19.2월
<p>○ 평잔액 등 자금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며 유휴자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부터 매년 자금수지 전망 및 자금관리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수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증대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자금관리 운용 계획 수립 : '19. 1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용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겠음 - 최근 3년간 월별 자금수지 현황을 분석하고 일평균 잔고를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제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빈집활용 및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제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16.9월)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를 통한 '출자 동의안' 의회 의결은 적법한 추진 절차로 판단됨 ○ 다만 '출자 동의안'을 통한 지방의회 의결 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16.9월)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출자 동의안' 의결을 받을 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출자 동의안'을 받도록 안내 하겠음 - 시 전부서 공문발송, 시업무공지 게시, 시·구 공유재산 담당자 집합교육 등을 통해 홍보·교육 실시
<p>○ 차기 시금고 선정 시 시민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금고 선정 : '18. 5월 -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지방세 납부 편의성 등 시민의 이용편의성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 ○ 차기 시금고 선정시 시민편의성과 안정성이 비중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생기는 세입 결손 관련 재무국과 기초실의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재무국은 항상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말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이행으로 서울의료원 주변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시장상황 형성이 전망되는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의료원 부지를 MICE지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년 매각수입 예산을 편성한 것임 ○ 유관부서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적정매각시기를 결정하고 서울의료원 매각 세입 관련 기초실과 적극 협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p>○ 시금고 은행 변경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기존시스템을 공유하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월부터 시금고 은행이 변경됨에 따라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 수납시스템을 이전·구축하였음 ○ 앞으로 시금고 변경에도 구축된 전산 수납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영역(수납/자금 집계정산 등)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서울시 소유로 하였으며, ○ 서울시 소유 건물인 상암동 소재 에스플렉스센터 건물 내 전산시스템을 입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플렉스센터 내 설치 전산실에 대해 세무과를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18.12.12) ○ 향후, 시금고 은행이 변경되더라도 서울시업무 영역의 서버, 네트워크, 프로그램 설치 등의 추가 부담금 발생은 없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금고 선정기준 중 지역사회 개혁 부분에 있어서 신한은행은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썼고 이는 서울시의 계획과 맞지 않음, 지역사회 개혁 계획안이 아닌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부담하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해서는 안됨. 지역사회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금고 선정('18.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비 평가항목은 1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하여 협력사업비 규모가 시금고 선정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 ○ 신한은행이 제안한 지역사회 기여계획(도시 재생,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시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18.9월) ○ 차기 시금고 선정시 지역사회 기여계획이 비중있게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음
<p>○ 스마트폰 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S-TAX의 만족도 조사를 서울시 엠보팅시스템으로 하는데 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 볼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어플의 사용자는 매우 불만이 많음. 또한 기존 시금고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2018년 4월까지만 답변을 달고 이후 답변이 없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납부 앱(STAX)을 전면 재구축하여 '19.1.1.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사항 : 모든 은행 납부, 지문/패턴/얼굴인식 인증확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설, 모범납세자 증명서 조회 등 ○ 앱 스토어 사용자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개선요구 반영 및 답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17 기준 앱 스토어 사용자 리뷰 평점은 5점 만점에 4.2점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조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작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음. 3일만에 11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사를 정밀하게 하기는 불가능함. 관련 규정을 지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일한 지적이 없기를 바램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2항)에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특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예정안건 11개 사업12건(취득11건, 처분1건)중 4건(중앙투자심사2건, 서울시투자심사2건)이 10월 말 사전절차 이행 완료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회의규칙에 따른 제출기한(10월 중순)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향후 의회의 심도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및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기한을 서울시의회와 협의 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계획 대상 사업 모니터링 : '19. 1월 ~ 10월 ○ 관리계획 제출기한 서울시의회와 협의 : ~ '19. 10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체납징수와 과오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바람 (38세금징수과,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특별정리기간 운영 - 압류재산 공매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 사회저명인사, 고급주택 거주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추진 ○ 과오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세정여건을 감안 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과세자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 과세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오납 발생 최소화 강구 - 세무종합시스템에 자기검증 기능 강화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 부과전 심의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부실과세 최소화 및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 불복 제기시 시·구간 공동대응을 통한 승소율 제고 - 시 세입분야 평가시 환급금 관리실태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과오납 발생에 대한 과세담당자의 업무 개선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19. 2월) ○ 과오납 사유분석을 통한 분류코드 오류발생 최소화 등 과세자료 적정 관리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체납차량 합동단속 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지방경찰청이 연2회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서울시·자치구·경찰청 합동단속 실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대, 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584 645 1449 990"> <thead> <tr> <th>합동단속일</th> <th>번호판영치</th> <th>차량건인</th> <th>징수액</th> <th>단속장소</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3,169</td> <td>59</td> <td>316</td> <td>반포IC, 전지역</td> </tr> <tr> <td>'17.06.07.</td> <td>537</td> <td>12</td> <td>73</td> <td>반포IC, 전지역</td> </tr> <tr> <td>'17.10.28.</td> <td>601</td> <td>12</td> <td>57</td> <td>여의교 하단, 전지역</td> </tr> <tr> <td>'18.05.24.</td> <td>742</td> <td>12</td> <td>61</td> <td>한남대교, 전지역</td> </tr> <tr> <td>'18.06.28</td> <td>762</td> <td>5</td> <td>62</td> <td>전지역</td> </tr> <tr> <td>'18.10.30</td> <td>527</td> <td>18</td> <td>63</td> <td>여의교 하단, 전지역</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판 영치 단속 후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음 	합동단속일	번호판영치	차량건인	징수액	단속장소	합계	3,169	59	316	반포IC, 전지역	'17.06.07.	537	12	73	반포IC, 전지역	'17.10.28.	601	12	57	여의교 하단, 전지역	'18.05.24.	742	12	61	한남대교, 전지역	'18.06.28	762	5	62	전지역	'18.10.30	527	18	63	여의교 하단, 전지역
합동단속일	번호판영치	차량건인	징수액	단속장소																																
합계	3,169	59	316	반포IC, 전지역																																
'17.06.07.	537	12	73	반포IC, 전지역																																
'17.10.28.	601	12	57	여의교 하단, 전지역																																
'18.05.24.	742	12	61	한남대교, 전지역																																
'18.06.28	762	5	62	전지역																																
'18.10.30	527	18	63	여의교 하단, 전지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년간 고액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징수실적은 매년 감소되고 있음. 고액체납자들의 날로 지능화되는 은닉수법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시세 규모 증가의 주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증가로 담세력 감소 - 국제인 소득세에 10%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체납증가(전체 체납규모의 70% 차지) - 부과액 증가에 따라 신규발생 체납('17년 2,641억) 증가 - 체납 후 매월 1.2% 증가산금 자연 증가분('17년 647억) ○ 체납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총력징수 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 법인체납 및 개인 2억원 이상 체납자 관리 전담팀 운영 -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 - 특히, 사회저명인사, 고급주택 거주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강력 추진하여 체납 규모를 줄여 나가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 : '19. 2월 ○ 호화생활자,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 ○ 2014년 3월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운영 ○ 검찰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NICE 등과 정보 공유 및 징수기법 도입으로 은닉재산 추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개원 후 연구실적 8년간 연평균 8건. 올해의 경우 연구실적 5건임. 연구요원 확보도 8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구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원이후 연구실적('11~) : 총 594건, 서울시 7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서울시 연구과제 : 의뢰 13건, 완료 6건, 진행 7건 ○ 연구요원 충원현황 (단위 : 명) <table border="1" data-bbox="612 577 1439 696"> <thead> <tr> <th>년 도</th> <th>'11</th> <th>'12</th> <th>'13</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h>'18</th> <th>'19</th> </tr> </thead> <tbody> <tr> <td>인 원 (누계)</td> <td>4</td> <td>9</td> <td>13</td> <td>12</td> <td>14</td> <td>14</td> <td>16</td> <td>22</td> <td>30</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세제개선 및 시세확충을 위해 시와 자치구의 세제·재정관련 연구과제 적극 발굴 및 의뢰 확대 	년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인 원 (누계)	4	9	13	12	14	14	16	22	30
년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인 원 (누계)	4	9	13	12	14	14	16	22	30												
<p>○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기준이 2014년1월1일 바뀌었음에도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음. 신고건수도 2016년, 2017년 각각 2건으로 제도가 정체 되어 있음.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재검토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홈페이지에 은닉재산 시민 제보에 대한 정보 수정 완료('18.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기간 : 연중 - 제보자격 :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모두 - 제보혜택 :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3천만원→1억원) - 제보방법 : 유선, 팩스, 메일, 전자신고 - 제보관리 : 은닉재산 제보 전담 TF팀 ○ 체납징수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709백만원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이후 50건 제보되어 709백만원 징수(포상금 55백만원 지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닉재산 시민 제보 창구 상시 운영 ○ 언론보도 자료 배포 등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의 세무직 비중이 높음. 팀장급 이상은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임용하여 변화가 필요함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 직원현황 : 228명(현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별도(8명) <table border="1" data-bbox="624 488 1437 672">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행정</th> <th>세무</th> <th>전산</th> <th>기술</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28</td> <td>85</td> <td>72</td> <td>19</td> <td>37</td> <td>15</td> </tr> <tr> <td>4급이상</td> <td>7</td> <td>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5</td> <td>31</td> <td></td> <td></td> <td>4</td> <td></td> </tr> <tr> <td>6급이하</td> <td>186</td> <td>47</td> <td>72</td> <td>19</td> <td>33</td> <td>1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은 총 6개부서로 이중 3개부서에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따라서 세무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타 실·국에 비해 세무직 비중이 높은 것은 불가피함 ○ 다만, 세무직이 승진하면(6급→5급) 직렬이 행정직으로 변경되므로 세무직이 팀장급으로 임용되지는 않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급 이상 임용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직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계	행정	세무	전산	기술	기타	계	228	85	72	19	37	15	4급이상	7	7					5급	35	31			4		6급이하	186	47	72	19	33	15
구분	계	행정	세무	전산	기술	기타																														
계	228	85	72	19	37	15																														
4급이상	7	7																																		
5급	35	31			4																															
6급이하	186	47	72	19	33	15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38세금징수와 포상금으로 매년 4억원이 쓰이고 있으며, 수납액과 목표액 달성율이 감소했음에도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서울시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부분임 시정해 주기를 바람 (38세금징수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부정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 ○ 최근 3년간 고액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내역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data-bbox="592 656 1444 887"> <thead> <tr> <th>년도</th> <th>체납액</th> <th>징수목표액</th> <th>징수액</th> <th>포상금</th> <th>지급율</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25,653</td> <td>1,245</td> <td>1,078</td> <td>11.4</td> <td>1.06</td> </tr> <tr> <td>2016년</td> <td>9,131</td> <td>415</td> <td>394</td> <td>3.9</td> <td>0.99</td> </tr> <tr> <td>2017년</td> <td>8,584</td> <td>415</td> <td>360</td> <td>4.1</td> <td>1.14</td> </tr> <tr> <td>2018년11월</td> <td>7,938</td> <td>415</td> <td>324</td> <td>3.4</td> <td>1.0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은 징수액에 따라 연도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지급율은 1.06%로 비슷함 ○ 포상금은 징수액의 체납발생연도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 달성과 별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발생연도 1년차(1%), 2년차(3%), 3년차(5%) ○ '18년 11월 현재 38세금징수와 포상금 지급 : 34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209백만원(징수액 29,671백만원의 0.7%) - 계약직 132백만원(징수액 3,298백만원의 4.0%)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 검토 	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징수액	포상금	지급율	합계	25,653	1,245	1,078	11.4	1.06	2016년	9,131	415	394	3.9	0.99	2017년	8,584	415	360	4.1	1.14	2018년11월	7,938	415	324	3.4	1.05
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징수액	포상금	지급율																										
합계	25,653	1,245	1,078	11.4	1.06																										
2016년	9,131	415	394	3.9	0.99																										
2017년	8,584	415	360	4.1	1.14																										
2018년11월	7,938	415	324	3.4	1.05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조직개편의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등의 물품관리 효율화 방안의 성과가 미비함. '아나바다 물품 효율화' 사이트는 담당자가 있으나 2014년 이후 사이트 운영이 안 되어 있음. 재무효율화를 위한 조치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바다물품장터 시스템 운영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접근(편의)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포털 내 대안 시스템 마련(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바다물품장터 폐쇄 및 '물품장터'게시판 신설 운영 : '19. 2월말
<p>○ 일반재산 수탁기관 선정시 선정위원회 미구성 및 선정 결과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음. 재검토 및 추후 방안 보고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상반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재계약 심사시 민간위탁 조례의 재계약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법시행령에 의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후 추가검증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결과 보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 동법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일 것과,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출연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의하여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야함. 현재 모순된 법령운영현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을 통해서라도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제도를 정비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의 재단법인으로 등록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에서 등기변경 의뢰('19.1월)한 법률사무소의 법원 판단근거서류 요청(주무관청 허가 및 정관 등, '19.2월)에 따라 - 행안부와 협의 및 연구원 정관변경(2~3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기 변경(4월) 예정 ○ 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에 대해 적용되므로 -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연구원에 검토 요청 및 행정안전부에 관련 건의('18.12.4.)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타 시·도와 공동으로 개선방안 지속 강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E-TAX 운영 관련, 일반과세와 중과세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5년이 지난 법인이 증자등기를 할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해야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해서 개선하길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면허세 E-TAX 신고 관련회의 개최(2018.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 5년 후 증자 등록면허세 E-TAX 일반과세 신고 활성화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 E-TAX에서 등록면허세 일반과세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협의 ○ 등록면허세 E-TAX 신고 개선 세부내용 검토 후 개선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종류 ‘영리법인 증자/비영리법인 증자/자산재평가 자본금 증자’의 경우 5년 경과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신고양식 변경 - E-TAX 신고시 일반과세로 착오 신고하여 추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시스템 내 공지 안내 ○ E-TAX 신고 서비스 시행('19. 1. 23.)
<p>○ 공채매입율이 경남은 5%, 서울시는 20% 정도인데 공채매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서울시 세입이 68억원 정도 증대되는데 이에 대한 조례개정 노력이 요구됨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공채 조례 소관부서(도시교통실 등)와 공채매입율 조정 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공채매입을 면제하는 도시철도공채조례 개정안 발의('17.7월, 김용석 의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공채조례 공채매입율 조정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유지매각관련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대형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음. 이를 총괄할 통일된 기준으로 조례 제정을 건의함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회의 공정성 및 절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가격 평정을 의뢰하고 있음 (확정순번제, '15.9.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지정순서에 의거해 법인을 추천하며 - 감정평가 의뢰의 목적과 재산가액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무소로 이원화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5억원 이하 매입, 매각, 교환 평가 포함) ▶ 사무소 : 기준가격 5억원 이하 재산(매입, 매각, 교환 평가는 제외) - 확정순번제 시행 이후 대형 및 중소형 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도별 의뢰횟수 <table border="1" data-bbox="584 1137 1434 1368"> <thead> <tr> <th></th> <th>대형 법인</th> <th>중소형 법인</th> <th>개인사무소</th> </tr> </thead> <tbody> <tr> <td>2016년</td> <td>14개소 41회</td> <td>38개소 81회</td> <td>13회</td> </tr> <tr> <td>2017년</td> <td>13개소 26회</td> <td>38개소 78회</td> <td>18회</td> </tr> <tr> <td>2018년(11.5.기준)</td> <td>13개소 25회</td> <td>45개소 67회</td> <td>31회</td> </tr> </tbody> </table>		대형 법인	중소형 법인	개인사무소	2016년	14개소 41회	38개소 81회	13회	2017년	13개소 26회	38개소 78회	18회	2018년(11.5.기준)	13개소 25회	45개소 67회	31회
	대형 법인	중소형 법인	개인사무소														
2016년	14개소 41회	38개소 81회	13회														
2017년	13개소 26회	38개소 78회	18회														
2018년(11.5.기준)	13개소 25회	45개소 67회	31회														
<p>○ 공채 매입에 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 공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채매입에 대한 조례개정 추진 관련 자료 제출('19.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시효결손처분 전 시효중단 노력을 위해 조치한 자료, 가족명의 위장이혼 등 은닉 조사현황 제출할 것
(38세금징수과)

추진상황 : 완료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시효결손 방지를 위한 중단 조치

(단위 : 건)

년도	합계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기타
	1,299,168	83,323	986,542	96,842	132,461
2016년	540,897	32,945	417,387	38,888	51,677
2017년	494,121	30,902	388,407	35,035	39,777
2018년	264,150	19,476	180,748	22,919	41,007

- 최근 3년간 위장이혼 은닉재산 조사 내역

(단위 : 명/백만원)

년도	체납자 명수	체납액	징수액
합계	48	2,859	577
2016년	18	413	135
2017년	17	931	432
2018년	13	1,515	10

- 최근 3년간 가족 재산은닉 조사 내역

(단위 : 명/백만원)

년도	체납자 명수	체납액	징수액
합계	17	7,255	715
2016년	5	4,954	153
2017년	8	1,454	456
2018년	4	847	106

향후계획

- 소멸시효 대상자에 대하여 만료 6개월 전 재산조사 후 압류
- 위장이혼 및 가족은닉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유재산관리강화대책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의 정보와 건축물·토지대장상 정보가 불일치하는 점에 대해 각 부서에 정비를 요청한 문서와 정비 현황을 제출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이후 자료정비 요청 문서 및 정비현황 자료제출 완료('18.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이후 자료정비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 정비 및 결과 제출요청 ('18.1.16) ▶ 2017년 공유재산 결산 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없는지번” 및 처분대기 자료 조치사항 재알림('18.2.8) ▶ 2017년 공유재산 결산 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취득대기재산” 조치사항 재알림('18.2.12) ▶ 공유재산관리대장 미등재 재산 등록 및 취득보고서 제출 요청 ('18.4.20)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취득 및 처분대기 자료 정비 요청 ('18.8.7)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자료 정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없는지번, 소유자·공유지분·면적·지목 불일치) 및 건물(없는지번, 주용도·건물명 불일치) 불일치자료 정비 완료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21%까지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은 15%로 인상하겠다고 함. 최종적으로 확실하고 빠른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국세의 지방이양 등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재원 지방이양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19~'20년):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19년 4%p+'20년 6%p) ▶ 2단계('21~'22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추가 지방세수 확충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 시행('1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마련 추진('19년) ○ 시도협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견서' 채택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계획은 미흡, 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협 재정분권 TF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 : '19.1월~ ○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관계학회 정책 토론회, 학술 세미나 등 공동 주최 등 : '19.3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복수금고를 통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오류 등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처음 시행하는 복수 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금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수인계('18.5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시금고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 : 총 2회 - 시금고 인수인계 실무협의체 운영 : 총 9회 ○ 시금고 전산시스템 개시 : '19.1.1. 22시 ○ 서울시청금융센터 개점식 : '19.1.9.
<p>○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고 지정 출혈 경쟁에 대하여 평가항목이나 배점 변경 또는 금고기간 연장 완화 등에 대하여 고려해보도록 하고, 시금고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신경써주기 바라며, 시민들이 시금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차기 시금고 선정 : '18.5월 ○ 시금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수인계('18.5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시금고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 : 총 2회 - 시금고 인수인계 실무협의체 운영 : 총 9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관련 회의시 평가항목, 배점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19.1.11)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2014-2018 구세, 시세, 환급이자 과오납 구분자료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 최근 3년간 해외연수에 참가한 직원의 직책과 명단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 해외연수에 갔었던 분들의 직책과 명단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 최근3년간 공유재산 5억이상 20억 미만 매각 현황 (자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 시금고 변경 관련 업무추진 중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항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시금고 지정관련 출연금 등에 관한 매뉴얼 작성하여 보고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금고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출연 및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매뉴얼로 하여 시행하고 있음 - 출연금은 현금으로 출연 - 금고약정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 - 재정공시항목에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공시 등
<p>○ 금고지정 시 약정체결 기간 조정사항이 있는 지 검토 후 개정사항을 보고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약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서의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등의 이유로 현재 약정체결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음('19.1월)
<p>○ e-tax 이용 그룹현황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18.11.20)